

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수명연장 본궤도...지역민 불안

영광군,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 위한 굴착 신고서 결국 접수 의견 수렴 절차도 종료...한수원, 수명연장 신청서 제출키로 1년 심사 뒤 연장 여부 결정...안전성 보장 안돼 우려 목소리

영광군이 세차례 반려했던 한빛원전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결국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본궤도에 올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속도=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영광 한빛원전 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굴착 신고를 받아들였다.

부지 굴착신고는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 조사를 위한 것으로 9곳에 직경 75mm 이상의 구멍을 최대 180m의 깊이로 굴착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의 사용후핵폐기물 보관시설 포화시점은 2030년이다. 수명연장을 위해서라도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추가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수원은 앞서 3차례(9월 1일, 22일, 26일) 영광군에 부지 굴착 신고를 했지만 영광군은 신청을 반려해왔다.

영광군은 임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세부계획과 국민 우려 해소방안 등을 요구하며 보완요청을 했다.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임시보관시설이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영광군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군의 반려가 계속되자 한수원은 지난달 23일 영광군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했다. 영광군은 전문가와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차례(10월 15일, 23일) 열었다.

위원회 결과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영광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임시 건식저장시설 운영기반, 영광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식저장시설 관련 학습권 보장, 군·의회를 포함한 안전 협의체 구성 등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2호기 수명연장도 급물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의 10년 수명 연장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장성·부안지역 주민공청회를 끝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 함평, 장성, 부안, 부안, 고창)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종료됐다.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장성군대책위원회가 29일 장성·부안지역 주민공청회가 열린 장성 군민회관 앞에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제공>

절차가 종료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는 사실상 끝이 난 것이다.

공청회 개최는 6월 발생한 부안 지진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미뤄져 왔다.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합평 주민들이 경주지원과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도 컸다.

하지만 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2차례 이상 무산될 경우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영광을 시작으로 고창과 함평, 무안군이 공청회를 열었고 장성과 부안군에서도 공청회가 재개됐다.

이후 한수원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포함한 주민 공청회 결과를 각 지자체에 일주일 내 통보해야 한다.

또 주민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으로 추려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서로 제출된다. 운영변경허가서는 최종안전분석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포함된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서가 제출되면 1년여간 심사를 통해 최종 수명연장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명연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이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장성군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형식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조안을 폐기하고 노후원전 재가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돼 있지 않으며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손해배상, 최신기술기준 준용 등이 이뤄지지 않은 '영터리'라고 주장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천 곳곳서 물고기 1000여 마리 폐사, 무슨 일?

자치구, 원인 파악 나서

광주천 곳곳에서 물고기 1000여 마리가 폐사해 관계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 동구와 남구, 북구는 29일 오전 8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설월교부터 남구 양림동 학강교 인근 광주천, 북구 임동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서방천까지 6km에 걸쳐 물고기 10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폐사체는 상류인 설월교에서부터 발생해 하류로 떠내려 온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천에서는 몸 길이 7cm 안팎의 피라미 500여마리가 폐사했으며, 서방천에서는 10cm 수준의 붕어 500여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광주천변에서 산책하던 시민들은 "물고기 사체가 무더기로 떠내려오고 있다", "물이 썩는 듯한 악취가 심하게 풍긴다"며 각 구청에 제보했다.

광주시 동·서·남·북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환경공단, 광주시 등이 간이 조사를 벌인 결과 서방천의 경우 용존산소량이 어류의 최소 요구 산소량(5ppm)에 못 미치는 3ppm으로 측정됐다.

다만 광주천의 용존산소량은 5ppm 이상인 것



광주환경공단 직원이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앞 서방천에서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로 확인됐으며, 기름띠 등 오염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상류인 설월교 인근에서 집단 폐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증심천, 광주천, 서방천 등의 물 시료를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광주 남성엔 '그림의 떡'

이용률 10% '전국 최하위권'

광주시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이들 중 남성의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보당 김태진 광주시 서구의원이 고용행 정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는 총 297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30명(10%)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간 주당 15~35 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을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면 근로 시간 단축으로는 18개월 쓸 수 있다.

광주시의 제도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은 부산, 인천, 울산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에 해당했다.

전국 평균 남성 비율은 11%였으며 제주도 19%, 충남 14%, 대전 12% 순으로 높았다.

광주시 5개 지구구별로는 서구가 3.4%로 가장

낮았으며, 광산구 15.1%, 남구 12.0%, 북구 9.1%, 동구 9.1% 등이었다.

김태진 의원은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등 다른 육아 지원 정책에 비해 남성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도가 낮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제도 이용 시 업무 배차, 승진, 보상, 평가에서 차별 경험 없이도 지원하고 조직 문화 개선, 임금 하락 대책 등 육아 근로 시간 단축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며,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 만큼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를"

시민단체 촉구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광주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29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가 발의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심지어 당사자인 학생들은 토론자에서 배제된 채 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조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조례 폐지안은 초·중·고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해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단체는 "조례 폐지안의 근거로 제시된 '학생 통제가 어렵고, 학력이 저하되고, 성별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은 학생인권과 학생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사고방식"이라며 "인권은 찬반이 없다.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며 광주를 지켰듯 학생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시각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시민 1만여명으로부터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받은 데 따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으며, 공청회를 바탕으로 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하고 상임의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국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땀 전기차 충전 문제없어"

광주 연간 4만6940kW 생산 가능

광주지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4만694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국의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국내 전 기차 수요의 약 2.4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날 발표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50구획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2.91GW 용량의 설비로 연간 5115GWh의 전력(효율 20%)을 생산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50구획 이상의 주차장

중 7994개를 지역별, 유형별, 운영주체(공영, 민영)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차장에만 지난해 국내 전기차 전체전력 소비량인 2,163 GWh의 약 2.4배 수준의 발전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태양광 설치 잠재량 상위 5대 주차장 중 대학교가 4곳, 화물차고지 1곳으로 이곳 주차장을 모두 활용 할 경우 1만 6771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은 50편 이하의 주차장이 많이 분포해 있어, 해당 주차장 목록에서는 다수 제외됐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 주차장,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이미 태양광발전이 전부 또는 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설치 계획도 예정되어 있어,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제외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2024년 금융의 날 '금융발전유공'

전남신용보증재단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앞으로도 전라남도의 경제발전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